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045
----------	-------

발의연월일 : 2025. 4. 22.

발 의 자 : 박해철 · 박지원 · 이수진
허성무 · 서미화 · 최민희
정일영 · 임호선 · 이훈기
이광희 · 김 윤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 및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기능조정 및 민영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은 국민 모두가 필요로 하는 필수 공공재로서 경영효율성 뿐만 아니라, 기관별 고유 설립 목적에 따른 운영과 공공서비스 제공의 보편성과 합리성, 민주성, 지속가능성 등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또한, 필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통폐합과 기능 재조정, 구조조정, 자산매각 및 민영화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국가적 의무를 방기하거나 보편적 공공서비스 가치를 훼손 또는 축소시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중요사항은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승인절차를 거쳐 결정함이 타당함.

이에 기획재정부 장관의 판단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을 주무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로 수정해 기능 조정의 필요성을 경영 일선인 기관에서 우선 판단하도록 하고, 기능 조정의 형식 중 관련 산업과 노동부문에 파급효과가 큰 지분매각과 인력감축의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장과 협의한 후”를 “장이 요청한 경우”로, “수립하여야 한다”를 “수립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산매각이나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거나 인력감축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획재정부장관이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계획을 새롭게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공기관의 민영화에 대한 국회의 권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산 매각, 정부가 소유한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매각, 또는 인력감축 등의 조치를 새롭게 추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주무기관의 <u>장과 협의한 후</u>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기관통폐합·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u>수립하여야 한다</u>. 이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립된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신 설></p> <p>② ~ ⑤ (생 략)</p>	<p>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① ----- ----- <u>장이 요청한 경우</u> ----- ----- ----- ----- ----- <u>수립할 수 있다</u>. ----- ----- -----.</p> <p>②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하여 <u>자산매각이나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거나 인력감축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u>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p>